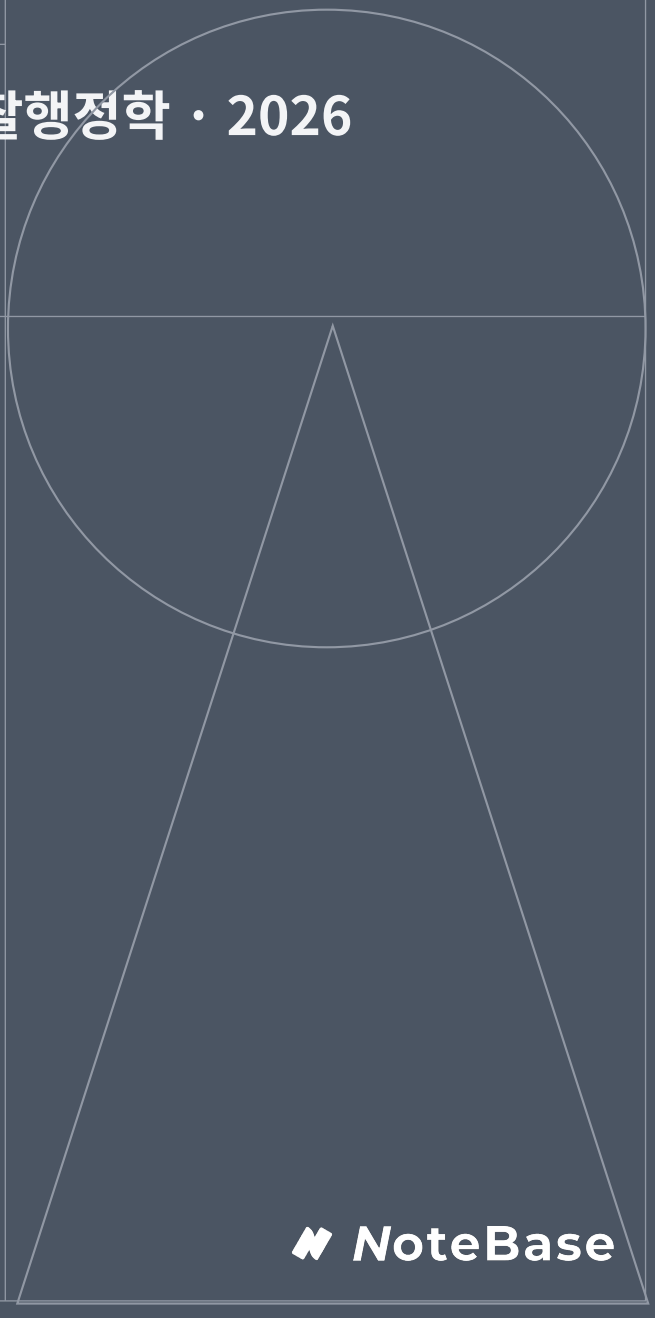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행정학 · 202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행정학 · 2026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행정학 · 2026

문 1. 행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치·행정일원론은 행정의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고 행정의 정책형성기능을 중시한다.

② 행정은 공동목표의 성취를 위한 협동적 인간행동이라는 점에서 경영과 차별성을 지닌다.

③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하기에 공·사 행정일원론의 입장과 비슷하다.

④ 최근의 행정은 주체가 정부(government)로 한정되지 않으며 다양하게 연결된 네트워크의 거버넌스(governance)로 확장되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동적 인간행동이라는 점은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이다. 행정의 차별성은 **공익 추구와 공적 책임** 등에서 나타난다.

선지별 해설

① O: 정치·행정일원론은 행정이 정해진 정책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형성에도 참여한다**고 본다. 행정과정에서 가치의 선택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이루어지므로 행정의 정치적 성격을 강조한다.

② X: 행정과 경영은 모두 조직 구성원이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동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협동적 인간행동이라는 성격은 차별성이 아니라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이다. 양자의 차이는 행정이 공익 실현과 국민에 대한 공적 책임을 중시하는 반면, 사기업의 경영은 이윤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③ O: 정치·행정이원론은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와 이를 집행하는 행정을 구분하고, 행정의 기술적·관리적 측면과 능률을 중시한다. 이처럼 **공통의 관리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면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이 강조되므로, 공행정과 사행정을 유사하게 보는 공·사 행정일원론과 연결된다.

④ O: 거버넌스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시민사회 등 여러 주체가 네트워크를 이루어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현대 행정의 주체와 활동 범위는 정부 조직을 넘어 **여러 주체의 참여와 협력**으로 확장된다. 이때 정부도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조정과 공적 책임의 역할을 수행한다.

NoteBase

문 2. 행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딜레마이론은 딜레마 상황으로 대안의 분절성, 대안 간 상충성, 결과 가치의 동등성, 선택의 불가피성 등의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② 역사적 제도주의는 정당체제와 같은 중범위 수준의 제도보다 계급과 같은 거시적 수준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관심을 둔다.

③ 포스트모더니티에서 의미하는 타자성(alterity)은 윤리와 무관한 객관적 관찰대상으로서의 인식적 타인이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정부가 방향을 잡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보며 행정의 역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딜레마는 대안 간 절충과 동시 선택이 불가능하고 결과 가치의 우열도 가리기 어렵지만, **어느 하나는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분절성·상충성·결과 가치의 동등성·선택의 불가피성이 그 구성 요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딜레마이론은 대안 사이에서 선택하기 어려우면서도 선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한다. 분절성은 대안들을 절충하여 하나로 합칠 수 없다는 것이고, 상충성은 대안들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과 가치의 동등성은 대안이 가져올 가치가 비슷하여 어느 쪽을 포기하기도 어렵다는 뜻이며, 선택의 불가피성은 **그럼에도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② X: 역사적 제도주의는 정당체제, 국가의 조직 구조, 정책결정 구조와 같은 **중범위 수준의 제도**가 행위자의 선택과 정책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계급과 같은 거시적 사회·경제 구조를 더 중시한다는 설명은 분석의 초점을 뒤바꾼 것이다. 제도가 형성되고 지속되는 역사적 맥락을 통해 국가나 정책 간 차이를 설명한다.

③ X: 포스트모더니티의 타자성은 타인을 자기 기준으로 환원하지 않고, 나와 다른 존재의 고유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관점이다. 타인은 윤리와 무관한 관찰대상이 아니라 **배려와 책임의 대상인 윤리적 타자**이다. 따라서 객관적 인식의 대상으로만 파악한다는 설명은 타자성이 강조하는 윤리적 관계를 놓친 것이다.

④ X: 신공공관리론은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생산·공급하는 '노젓기'보다 정책 방향을 정하고 집행을 관리하는 **'방향잡기'**를 강조한다. 방향잡기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시민이 공익을 함께 찾아 실현하도록 돕는 **'봉사하기'**를 강조하는 것은 신공공서비스론이다. 이때 봉사는 정부의 직접적인 서비스 생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공동의 이익 실현을 지원하는 역할을 뜻한다.

NoteBase

문 3. 과정설에 따른 공익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부는 공익결정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② 사익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공익은 존재할 수 없다.

③ 사회 내 모든 구성원의 총효용을 극대화한 것이 공익이다.

④ 공동체를 개인보다 우선시하므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과정설은 공익을 **다양한 사익의 조정·타협으로 형성되는 결과**로 본다. 따라서 사익과 본질적으로 구별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공익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정부가 공익의 내용을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실체설의 적극적 정부관에 가깝다. 과정설에서는 정부가 여러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립적 조정자**의 역할을 맡는다.

② O: 과정설은 공익을 다양한 사익이 경쟁하고 타협·조정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익을 초월하여 별도로 존재하는 공익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익 자체를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익과 본질적으로 다른 공익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부정한다는 뜻이다.

③ X: 사회구성원의 효용을 합산한 총량이 최대가 되는 상태를 공익으로 보는 것은 '전체효용극대화설'의 설명이다. 이는 총효용이라는 실질적 결과를 공익의 기준으로 삼는다. 과정설을 설명하려면 총효용의 크기보다 **여러 이해관계가 조정·타협되는 과정**에서 공익이 형성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④ X: 공동체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것은 실체설의 공익우선적 관점에 해당한다. 이 관점에서는 공익을 내세워 개인의 권익을 희생시킬 위험이 있다. 과정설은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이익을 출발점으로 삼아 **상호 조정과 타협**을 통해 공익을 형성한다고 본다.

NoteBase

문 4. 정치적 중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특정 정파에 좌우되지 않고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정치적 중립은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

③ 헌법은 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면서 해당 법률에는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기구에 관하여 규정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④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3번

①

직무 처리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종속되면 같은 사안도 정치적 편향에 따라 달리 처리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은 이러한 영향을 배제하여 **정파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직무 수행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원칙이다.

②

정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공직을 배분하는 엽관주의는 정권 교체에 따른 대규모 인사 변동과 정파적 행정을 초래한다. 정치적 중립은 이러한 폐해를 막아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

③

현행 헌법은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할 뿐, **그 법률에 경찰의 중립 보장 기구를 규정하도록 명시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 ·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④

경찰공무원은 **정당·정치단체 가입과 정치활동 관여가 금지**된다.

경찰공무원법 제23조(정치 관여 금지)
① 경찰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teBase

문 5. 공공가치(관리)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가치론은 신공공관리론이 행정의 효율성과 수단성만을 강조함으로써 행정의 공공성 약화가 초래되었다고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② 무어(Moore)는 공적 가치 창출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정당성과 지원 확보, 공적 가치의 형성, 운영 역량의 형성으로 제시하며 전략적 삼각형(strategic triangle)으로 표현했다.

③ 정당성과 지원 확보는 외부환경으로부터의 정당성 부여 환경을 의미하며 시민의 지지 및 정당성, 선출직 대표에 대한 책무성, 시민사회와의 관계, 미디어 평판 등을 중요 요소로 한다.

④ 보우즈만(Bozeman)은 시장 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공공가치 실패' 현상이 발생할 수 없다고 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보우즈만은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더라도 공공가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시장의 자원배분 효율성과 인간의 기본적 생존 등 공적 가치의 실현은 별개의 판단 기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공공가치론은 신공공관리론이 시장 원리와 성과·효율성을 중시하면서 민주성·형평성 등 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발전했다. 행정의 목적을 단순한 비용 절감이나 서비스 생산성 향상을 넘어 **시민과 사회 전체가 중시하는 가치의 창출**로 확장한다.

② O: 무어의 전략적 삼각형은 공적 가치의 형성, 정당성과 지원 확보, 운영 역량의 형성으로 구성된다. 각각 행정이 실현하려는 바람직한 사회적 성과, 그 활동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승인과 지지, 실제 실행에 필요한 인력·재원·조직의 능력을 뜻한다. 공공가치를 창출하려면 **세 요소가 서로 부합하고 뒷받침해야 한다**.

③ O: 정당성과 지원 확보는 공공관리자의 활동을 승인하고 뒷받침하는 **외부의 정당성 부여 환경**에 관한 요소이다. 시민의 지지와 정당성, 선출직 대표에 대한 책무성, 시민사회와의 관계, 미디어 평판은 모두 행정 활동이 공적으로 인정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얻는 데 영향을 미친다.

④ X: 보우즈만은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해도 공공가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시장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사회가 중시하는 공적 가치의 실현까지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공공가치 실패는 공적 가치가 충족되지 못하는 현상으로, 시장거래가 인간의 기본적 생존을 위협하거나 편익이 일부에게 독점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NoteBase

문 6. 정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관리규제는 산출규제라고도 하며 바람직한 최적의 성과 수준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② 규제 피라미드는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의 정부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③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형태를 띠며 포지티브 규제에 비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해 준다.

④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모형에서 이익집단정치는 규제비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되나 그 편익은 동질적 소수에게 귀속되는 상황에서 나타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사항 외에는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한다. 허용된 사항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넓게 보장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산출규제'라고도 하는 것은 **성과규제**이다. 성과규제는 달성해야 할 결과나 성과수준을 정하고 구체적인 달성 수단은 피규제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적정한 성과수준을 설정하고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관리규제는 피규제자가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과 내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그 관리과정을 감독하는 방식이다.

② X: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하거나 출시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과 기간 아래 기존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는 **규제 샌드박스**이다. 규제 피라미드는 설득과 자율적 준수 유도 같은 약한 수단부터 강한 제재까지 규제수단을 단계적으로 배열한 모형이다. 피규제자의 준수 여부와 반응에 따라 규제 강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데 활용한다.

③ O: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되는 사항을 정하고 그 밖의 행위는 허용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이다. 반면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되는 사항을 정하고 그 밖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따라서 네거티브 규제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새로운 활동도 가능하게 하므로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넓게 보장한다.

④ X: 규제비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고 편익은 동질적인 소수에게 집중되는 유형은 **고객정치**이다. 윌슨의 이익집단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각각 특정한 소수 집단에 집중되는 경우이다.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과 편익을 얻는 집단 모두 조직적으로 대응할 유인이 크므로 이익집단 사이의 대립과 협상이 나타난다.

NoteBase

문 7. 로위(Lowi)의 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집권화되고 체계수준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며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

② 정책목표에 의해 일반국민들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이다.

③ 정책내용이 세부단위로 쉽게 구분되고 각 단위는 다른 단위와는 별개로 처리될 수 있다.

④ 이해당사자 간 제로섬(zero-sum) 게임이 벌어지고 참여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분배정책은 편익을 세부 사업이나 수혜자 단위로 나누어 **각 단위를 독립적으로 처리**하기 쉽다. 다른 집단의 편익을 직접 줄이지 않고도 개별 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 이해당사자 간 직접적인 갈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선지별 해설

분배정책은 특정 개인·집단·지역에 재화나 서비스, 편익을 배분하는 정책이다. 개별 사업으로 나누어 처리하기 쉬우며, 편익은 특정 대상에 돌아가지만 비용은 넓게 분산되므로 직접적인 이해대립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① X: 집권적인 체계수준의 결정과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재분배정책**의 특징이다. 재분배정책은 소득·재산 등의 계층 간 배분을 바꾸므로 사회 전체의 분배구조가 쟁점이 된다. 분배정책은 개별 사업이나 수혜자를 중심으로 분권적인 하위체계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② X: 국민에게 조세나 병역처럼 인적·물적 자원을 부담시켜 정부가 확보하는 것은 **추출정책**이다. 분배정책은 정부가 확보한 자원으로 국민에게 편익을 배분하는 데 초점이 있다.

③ O: 분배정책은 정책내용을 세부 사업이나 수혜자 단위로 나누어 **각 단위를 비교적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한 집단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다른 집단의 요구도 별도로 반영할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사업의 지원을 교환하는 협력이 가능하다.

④ X: 수혜자와 피해자가 구별되어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의 손실로 이어지는 **제로섬적 이해대립은 규제정책**의 특징에 해당한다. 분배정책은 개별 편익을 나누어 배분하고 비용을 넓게 분산하므로 상대적으로 갈등이 약하며, 참여자들이 서로의 사업을 지지하는 비제로섬적 관계가 나타나기 쉽다.

NoteBase

문 8. 증거기반 정책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건정책, 사회복지, 형사정책 등 휴먼서비스 관련 분야에서는 인간의 보편적 존엄을 구현한다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평가된다.

② 객관적 자료를 분석해서 얻은 검증된 지식을 중시하는 과학정신과 이를 통해 재정지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실용주의 사고가 뒷받침되고 있다.

③ 헤드(Head)는 증거기반 정책결정 성공 조건으로 양호한 정보 기반, 우수한 전문가, 조직 차원의 인센티브, 연구자·일선관료·정책결정자 사이의 상호 이해 과정 등을 제시했다.

④ 정책결정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에 의한 증거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보건·복지·형사정책은 증거기반 정책결정이 활발히 활용되는 대표적인 휴먼서비스 분야이다. 인간의 존엄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적용이 어렵다고 보지 않으며, **개입의 효과를 검증**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보건정책·사회복지·형사정책 등 휴먼서비스 분야는 증거기반 정책결정이 **활발하게 발전해 온 분야**이다. 어떤 서비스나 개입이 대상자의 삶과 안전을 실제로 개선하는지 연구·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한다. 인간의 보편적 존엄이라는 가치가 증거 활용을 어렵게 하는 근거는 아니며, 그 가치를 실현할 효과적인 수단을 찾는 데 증거를 활용할 수 있다.

② O: 객관적인 자료와 체계적인 분석으로 검증된 지식을 얻으려는 과학정신,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정책에 자원을 쓰려는 실용주의가 증거기반 정책결정을 뒷받침한다. 사업의 효과와 비용을 비교하면 효과가 낮은 지출을 줄이고 재원을 배분할 근거를 얻으므로 **재정지출의 효율적 통제**에도 도움이 된다.

③ O: 헤드(Head)는 양질의 정보 기반, 자료 분석·정책평가 능력을 갖춘 전문가, 증거 활용을 장려하는 정치적·조직적 인센티브, 연구자·정책 실무자·정책결정자 간의 상호 이해를 주요 조건으로 제시했다. 정보와 전문가가 분석의 질을 높이고, 인센티브와 상호 이해가 **연구 결과를 실제 정책에 연결**한다. 일선관료의 현장 경험도 연구자와 정책결정자가 이해해야 할 실무 지식에 해당한다.

④ O: 증거기반 정책결정은 정책문제와 대안의 효과를 판단할 때 과학적 연구·평가에서 얻은 증거를 활용하는 접근이다. 대안을 비교하고 예상 효과를 검토할 근거가 생기므로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높인다**. 다만 증거가 가치 판단이나 정치적 판단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최적의 결정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9. 정책의제설정 유형 중 내부접근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익집단의 활동이 활발하고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원화된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난다.

② 외교·국방 등 비밀유지가 필요한 분야나 강한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하려는 정책에서 나타난다.

③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제 채택을 정부에게 강요하는 경우로 허쉬만(Hirschman)은 '강요된 정책문제'라고 하였다.

④ 정책담당자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의제를 설정한다는 점은 동원형과 유사하지만, 동원형과 달리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과정을 거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내부접근형은 정부 내부나 정책결정자와 가까운 집단이 **공중의제화 없이** 정부의제를 형성하는 유형이다. 비밀유지가 필요하거나 공개적인 논의로 반대가 확산될 수 있는 정책에서 나타난다.

선지별 해설

① X: 이익집단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원화된 정치체제는 **외부주도형**이 나타나기 쉬운 환경이다. 외부주도형에서는 정부 밖의 집단이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을 형성하여 공중의제로 확산시킨 뒤,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다루도록 요구한다.

② O: 내부접근형에서는 정부 내부의 관료나 정책결정자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집단이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문제를 정부의제로 채택하게 한다. 따라서 외교·국방처럼 비밀유지가 필요하거나, 공개적인 논의로 반대가 확산되면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정책에서 나타난다.

③ X: 외부집단이 여론과 압력을 통해 정부에 정책의제 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외부주도형**이다. 선지의 '강요된 정책문제'도 외부의 요구 때문에 정부가 문제를 다루게 된다는 의미이다. 내부접근형은 이런 공론화와 외부 압력보다 정책결정자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통해 의제를 형성한다.

④ X: 정책담당자들이 의제설정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은 동원형과 유사하지만,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지를 얻으려는 유형은 **동원형**이다. 동원형은 정부의제를 공중의제로 확산하여 정책 집행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한다. 내부접근형은 공중의제로의 확산을 추구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에도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가진 제한된 집단을 중심으로 지지를 확보한다.

NoteBase

문 10. 앨리슨(Allison)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정책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합리모형(Model Ⅰ), 조직과정모형(Model Ⅱ), 관료정치모형(Model III)을 제시했다.

② 조직과정모형은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체들이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③ 실제 정책결정에서는 어느 하나의 모형이 아니라 세 가지 모형 모두 적용될 수 있다.

④ 합리모형은 조직의 상위계층에 적용가능성이 높고, 관료정치모형은 하위계층에 적용가능성이 높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합리모형은 **조직 전반**에 적용될 수 있고, 관료정치모형은 고위 정책결정자들의 협상과 타협이 중요한 **상위계층**에 적용가능성이 높다.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하위계층의 결정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은 조직과정모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앨리슨은 정부의 정책결정을 분석하는 틀로 합리모형(Model Ⅰ), 조직과정모형(Model Ⅱ), 관료정치모형(Model III)을 제시했다. 합리모형은 정부를 하나의 합리적 행위자로 보고 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대안 선택을 설명한다. 조직과정모형은 하위조직의 일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을, 관료정치모형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협상과 타협을 중시한다.

② O: 조직과정모형은 정부를 느슨하게 연결된 반독립적 하위조직들의 연합체로 본다. 각 하위조직은 업무를 처리할 때 이미 정해진 **표준운영절차(SOP)**와 프로그램에 의존하므로, 정책은 이러한 조직 활동의 산출물로 설명된다. 표준운영절차란 반복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정해 둔 업무처리 규칙이다.

③ O: 세 모형은 **상호배타적인 설명이 아니다**. 하나의 정책결정에서도 국가 차원의 목표와 대안 선택, 하위조직의 업무처리 관행, 참여자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함께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정책을 세 관점에서 분석하면 각 모형이 강조하는 서로 다른 측면을 보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④ X: 합리모형은 조직 전체가 공통 목표를 추구하는 하나의 행위자라는 관점이므로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조직 전반**에 적용될 수 있다. 관료정치모형은 권한과 영향력을 가진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각자의 목표와 이해관계에 따라 협상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중시하므로 **상위계층**에 적용가능성이 높다. 하위계층의 정형화된 업무처리를 설명하는 데는 표준운영절차를 중시하는 조직과정모형의 적용가능성이 높다.

NoteBase

문 11.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정책대안이 가져오게 될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한다.
㉡ 정책의 능률성 또는 경제성을 강조하므로 형평성 또는 공평성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 공공사업의 경우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할인율이 너무 낮으면 편익의 현재가치가 작아져 바람직한 사업이 타당성 없는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정책대안 선택기준은 순현재가치(NPV), 편익비용비(B/C ratio), 내부수익률(IRR) 등이 있고 내부수익률 기준은 정책사업에 적용할 적절한 할인율을 알지 못하면 사용하기 어렵다.
㉤ 순현재가치(NPV)와 편익비용비(B/C ratio)는 높을수록, 내부수익률(IRR)은 낮을수록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미래편익의 현재가치는 **할인율이 낮을수록 커진다**.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므로 별도의 할인율을 미리 정하지 않고 산정하며, 통상적인 투자사업에서는 기준 할인율보다 높아야 경제성이 있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 O: 비용편익분석은 정책대안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비용과 편익을 가능한 한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비교한다. 시장가격으로 쉽게 측정되는 항목뿐 아니라 환경 개선이나 삶의 질 변화처럼 **화폐가치 측정이 어려운 무형의 영향도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측정이 어렵다는 것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다르다.

㉡ O: 비용편익분석은 투입한 자원에 비해 얼마나 큰 사회적 순편익을 얻는지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총편익이 총비용보다 크더라도 특정 집단이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집단이 편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분배의 형평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형평성을 판단하려면 집단별 비용·편익의 귀속 등 분배 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 X: 공공사업의 할인율은 사회적 시간선호와 자원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시장이자율보다 반드시 높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 편익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할 필요도 논의된다. t년 뒤의 양(+)의 편익 B를 할인율 r로 할인한 현재가치는 $PV = \frac{B}{(1+r)^t}$이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으면 **할인율이 낮을수록 미래편익의 현재가치는 커진다**. 높은 할인율로 미래편익이 지나치게 작게 평가될 때 바람직한 사업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 X: 순현재가치, 편익비용비, 내부수익률은 모두 비용편익분석의 판단 기준이다. 그러나 내부수익률은 예상 비용과 편익의 흐름에서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역으로 구하는 값**이므로, 산정하기 전에 적용 할인율을 별도로 정할 필요는 없다. 사전에 할인율을 정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해야 하는 것은 순현재가치와 편익비용비이다. 다만 산정한 내부수익률로 사업의 채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회적 할인율 등 비교 기준이 필요하다.

㉤ X: 순현재가치는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값이고, 편익비용비는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이다. 통상적인 투자사업에서는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고 편익비용비가 1보다 크며, **내부수익률이 기준 할인율보다 높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내부수익률도 낮을수록 유리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규모와 비용·편익의 발생 시점이 다른 대안들을 비교하면 세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옳은 보기는 ㉠과 ㉡의 2개이므로 ①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2.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교사, 일선경찰관 등은 국민과 직접 접촉하며 계층제적인 구조 속에 놓여 있지만 의사결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

② 불충분한 자원, 권위에 대한 도전,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등과 같은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에 노출된다.

③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단순화와 정형화라는 적응매커니즘을 개발한다.

④ 충분한 재량과 적응매커니즘을 통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개별적인 집행 상황에 맞도록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일선관료는 업무 부담에 대처하면서 **단순화·정형화된 처리 방식**을 사용한다. 이는 대상자를 고정된 범주로 판단하게 하여 개별 사정에 대한 고려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집행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선지별 해설

① O: 일선관료는 교사·일선경찰관처럼 국민과 직접 접촉하며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다. 계층제적 조직에 속하더라도 규칙과 상급자의 지시만으로 다양한 현장 상황을 모두 정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집행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한다.

② O: 일선관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시간·정보 등 자원이 부족하고, 업무 과정에서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에 직면한다. 또한 상급자·동료·국민이 요구하는 역할이 모호하거나 서로 충돌하여, **부족한 자원과 상충하는 기대**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③ O: 복잡한 사례를 매번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대상자나 상황을 몇 가지 범주로 단순화하고 반복적인 처리 절차를 만든다. 이러한 **단순화와 정형화**는 불확실성과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달하는 적응 방식이다.

④ X: 단순화와 정형화는 개별 사정을 충분히 살피기보다 고정된 범주와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적응 방식은 **고정관념에 따른 획일적 처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재량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유연한 집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13. 실험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진실험은 준실험에 비해 내적 타당성면에서 우수하나 실행가능성 면에서는 준실험이 보다 우수하다.

② 준실험은 단일집단 사후측정설계를 널리 활용하나 짝짓기(matching)를 통한 통제집단 구성도 가능하다.

③ 진실험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대상들을 두 집단에 무작위 배정한다.

④ 사회실험은 사회라는 상황 속에서 행하여지는 실험이지만 기본 논리는 실험실에서의 실험과 동일하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단일집단 사후측정설계는 통제집단과 사전측정 없이 처치 후의 결과만 관찰하는 **원시실험설계**이다.
준실험에서는 무작위 배정 대신 짝짓기 등을 이용해 비교집단을 구성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내적 타당성은 관찰된 결과가 다른 요인이 아니라 실험처치 때문에 나타났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이다. 진실험은 **무작위 배정으로 집단 간의 체계적인 차이를 줄이므로** 준실험보다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반면 준실험은 무작위 배정을 요구하지 않아 비용·윤리·행정상 제약을 덜 받으므로 일반적으로 실행가능성이 더 높다.

② X: 단일집단 사후측정설계는 한 집단에 처치를 가한 뒤 결과를 한 번 측정하는 **원시실험설계**이다. 사전측정과 통제집단이 모두 없으므로 관찰된 결과가 처치의 효과인지, 원래의 집단 특성이나 다른 요인의 영향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준실험은 무작위 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나 시계열설계 등을 이용한다. 짝짓기로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특성이 비슷한 대상을 골라 통제집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부분은 준실험에 해당한다.

③ O: 진실험은 평가대상자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작위로 배정**하여 처치 이전의 집단 간 차이가 체계적으로 생기는 것을 줄인다. 이는 두 집단의 통계적 동질성을 확보해 처치 후 결과 차이를 실험처치의 효과로 해석하기 위한 것이다. 무작위 배정이 개별 특성까지 완전히 같게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

④ O: 사회실험은 실제 사회현장에서 정책이나 사업을 실험적으로 실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실험실 실험과 마찬가지로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처치를 가하고 결과를 비교하면서 **다른 요인의 영향을 통제해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실험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통제의 용이성은 다르지만 이러한 기본 논리는 같다.

따라서 원시실험설계를 준실험의 방법으로 설명한 ②가 가장 적절하지 않다.

NoteBase

문 14. 민츠버그(Mintzberg)의 조직 유형별 조정 기제와 핵심 부문에 관한 연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조직 유형	조정 기제	핵심 부문
㉠ 단순구조	- 직접감독(통제)	- 최고(전략)층
㉡ 기계적 관료제	- 작업과정(표준화)	- 핵심운영층
㉢ 전문적 관료제	- 기술표준화	- 기술구조
㉣ 사업부제 구조	- 산출표준화	- 중간관리층
㉤ 임시특별구조	- 상호조절	- 지원 참모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기계적 관료제는 업무 절차를 설계하는 **기술구조**가, 전문적 관료제는 표준화된 전문지식·기술로 일하는 **핵심운영층**이 핵심 부문이다. 두 조직 유형의 조정 기제는 각각 작업과정의 표준화와 기술표준화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조정 기제는 나누어진 업무를 서로 맞추는 방법이고, 핵심 부문은 해당 조직 유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 O: 단순구조는 최고관리자가 부하에게 지시하고 업무를 통제하는 직접감독으로 조정한다. 권한이 **최고(전략)층에 집중**되므로 이 부문이 조직의 핵심이다.

㉡ X: 기계적 관료제의 조정 기제는 작업과정의 표준화이지만, 핵심 부문은 핵심운영층이 아니라 **기술구조**이다. 기술구조의 분석가가 업무 수행 방법·규칙·절차를 설계하여 반복적인 작업을 표준화한다.

㉢ X: 전문적 관료제는 교육·훈련으로 전문지식과 숙련을 갖추게 하는 기술표준화로 조정한다. 핵심 부문은 기술구조가 아니라 전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핵심운영층**이다. 여기서 기술표준화는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지식·숙련의 표준화를 뜻한다.

㉣ O: 사업부제 구조는 각 사업부에 운영 권한을 주되 성과 목표와 산출 기준으로 통제하므로 산출표준화가 주요 조정 기제이다. 사업부를 관리하는 **중간관리층**이 핵심 부문이다.

㉤ O: 임시특별구조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유연하게 협력하는 조직으로,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조절**로 업무를 조정한다.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협업에 참여하는 지원 참모가 핵심 부문이다.

따라서 연결이 모두 옳은 보기는 ㉠·㉣·㉤이며, 이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③이다.

NoteBase

문 15. 번스(Burns)와 스토커(Stalker)의 기계적 구조에 관한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모호한 책임관계
㉡ 적은 규칙·절차
㉢ 비공식적·인간적 대면관계
㉣ 분화된 채널 범위
㉤ 넓은 통솔 범위
㉥ 좁은 직무 범위
㉦ 계층제
㉧ 표준운영절차

① ㉠㉣㉤
② ㉡㉢㉦
③ ㉣㉥㉧
④ ㉥㉦㉧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기계적 구조는 **직무를 좁게 세분**하고 **계층적 지휘와 표준화된 절차**로 구성원의 활동을 통제한다. 따라서 역할과 의사소통이 유연한 유기적 구조보다 책임관계가 분명하고 공식화 수준이 높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번스와 스토커의 기계적 구조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세분하고 공식적인 지시와 규칙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구조이다. 유기적 구조는 변화에 대응하도록 역할과 의사소통을 유연하게 운영한다.

㉠ X: 모호한 책임관계는 유기적 구조의 특성이다. 기계적 구조는 각 직위의 권한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므로 **책임관계가 분명하다**.

㉡ X: 적은 규칙·절차는 구성원의 재량과 유연한 대응을 중시하는 유기적 구조의 특성이다. 기계적 구조는 업무 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규칙과 절차**를 둔다.

㉢ X: 비공식적·인간적 대면관계는 유기적 구조의 특성이다. 기계적 구조에서는 개인적 친분보다 직위와 규칙에 따른 **공식적·비인격적 관계**가 중심이 된다.

㉣ X: 분화된 채널 범위는 여러 방향으로 의사소통하는 유기적 구조의 특성이다. 기계적 구조는 **계층을 따르는 제한된 수직적 의사소통 경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직무를 전문적으로 세분하는 것과 의사소통 채널을 다원화하는 것은 구별된다.

㉤ X: 넓은 통솔 범위는 유기적 구조의 특성이다. 기계적 구조는 상급자가 부하의 업무를 면밀하게 감독하므로 한 사람이 직접 감독하는 부하의 수를 적게 두는 **좁은 통솔 범위**를 특징으로 한다.

㉥ O: 기계적 구조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세분하고 각 구성원에게 한정된 과업을 맡기므로 **개인의 직무 범위가 좁다**. 유기적 구조에서는 공동 과업에 맞추어 역할이 조정되므로 직무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 O: 기계적 구조는 상하 직위를 구분하고 권한·책임·명령의 관계를 정하는 **계층제**를 중시한다. 상급자의 공식적 권한을 바탕으로 하급자의 활동을 조정하고 통제한다.

㉧ O: 표준운영절차는 반복되는 업무를 일정한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미리 정한 절차이다. 기계적 구조는 이러한 **업무 처리의 표준화**를 통해 구성원의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한다.

따라서 기계적 구조의 특성은 ㉥·㉦·㉧이며, 이를 모두 고른 선택지는 ④이다.

NoteBase

문 16. 고위공무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미국의 SES(Senior Executive Service)는 직위분류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78년 카터(Carter) 정부의 「공무원 제도 개혁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제약을 완화하는 대신 성과관리 요소를 반영한 제도로 한국에서는 계급제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였으며, 영국 SCS(Senior Civil Service)의 도입취지와 유사하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의하면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직급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으로 정의되고 있다.
㉣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반영해 보수를 책정하고, 업무성과 달성도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3번

㉠

미국의 SES는 **직위분류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고위관리자의 탄력적 활용과 성과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1978년 카터 정부의 공무원제도개혁법**으로 도입되었다. 실제 시행은 1979년이다.

㉡

한국의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제를 바탕으로 직무·직위 중심의 인사관리와 성과책임을 결합**한 제도이다. 영국 SCS도 기존 계급구조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직무책임과 성과 중심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갖는다.

NoteBase

㉣

고위공무원단의 법정 정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다. 선지는 '직위'를 '직급'으로 잘못 표현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 ·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2021.1.12>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 · 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 제125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

고위공무원단은 일반적으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를 반영한 직무급**을 기본연봉에 포함하고,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등급에 따라 성과연봉을 차등 지급**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63조(고위공무원의 보수)
②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기준급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직무급으로 구성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70조(성과연봉 등의 지급)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하되,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에 상당하는 금액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의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10.1.7, 2017.1.6, 2017.7.26, 2020.1.7>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은 성과계약등 평가의 결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평가등급별로 별표 41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1.7, 2016.1.8, 2021.1.5>

NoteBase

문 17. 조직 내 의사전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명령, 예규, 품의는 하향적 의사전달 방식이다.

② 사전심사, 사후통지, 회람이나 공람은 수평적 의사전달 방식이다.

③ 면접, 고충심사, 결재제도는 정보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하의상달 방식이다.

④ 공식적 의사전달은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자료보존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명령과 예규는 상급자의 지시를 아래로 전하는 방식이지만, 품의는 하급자가 안건을 올려 상급자의 결재를 구하는 **상향적 의사전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명령과 예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나 업무처리 기준을 전달하는 하향적 의사전달이다. 그러나 품의는 하급자가 처리할 안건을 상급자에게 올려 결재를 구하는 **상향적 의사전달**이다. 따라서 세 가지를 모두 하향적 방식으로 묶을 수 없다.

② O: 수평적 의사전달은 같은 계층의 구성원이나 부서 사이에서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사전심사는 일을 처리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고, 사후통지는 처리된 사항을 관련 부서에 알리는 것이다. 회람이나 공람도 관련자들이 문서의 내용을 함께 확인하게 하므로 **부서 간 협조와 정보 공유**를 위한 수평적 전달 수단이 된다.

③ O: 상향적 의사전달인 하의상달은 하급자의 정보나 의견이 상급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면접에서는 하급자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고, 고충심사에서는 하급자의 불만이나 고충을 상부에 전달한다. 결재제도도 하급자가 **안건을 상신하여 상급자의 판단을 구하는 과정**에서 상향적 의사전달이 이루어진다.

④ O: 공식적 의사전달은 조직이 정한 경로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전달자와 수신자 및 처리 경로가 분명하므로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쉽고**, 전달 내용과 처리 과정을 문서나 기록으로 남겨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다시 활용하기에도 유리하다.

NoteBase

문 18. 조직 내 갈등관리전략 중 갈등해소전략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상위목표 제시 ㉡ 회피
㉢ 타협 ㉣ 조직의 분화
㉤ 정보량 조절 ㉥ 순응
㉦ 인사이동 ㉧ 공공의 적 설정(확인)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상위목표와 함께 대응할 적을 제시하면 당사자들이 협력하게 되고, 회피·타협·순응은 직접적인 대립을 줄인다. 조직의 분화·정보량 조절·인사이동은 이 문항에서 **긴장과 변화를 유발하는 갈등조성전략**으로 구분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갈등해소전략은 지나친 대립을 완화하거나 협력을 유도하는 방법이며, 갈등조성전략은 침체된 조직에 적절한 긴장과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이다. 동일한 관리 수단도 목적과 적용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칭만으로 언제나 한쪽에 속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 상위목표 제시: 갈등해소전략이다. 당사자들이 단독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공통의 상위목표**를 제시하여 협력이 필요하게 만든다. 각자의 대립보다 함께 목표를 이루는 일이 중요해지므로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된다.

㉡ 회피: 갈등해소전략이다. 쟁점을 당장 다루지 않거나 갈등 상황에서 물러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한다. 즉각적인 대립을 줄이는 소극적 방식이며, 갈등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거나 지속적인 해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타협: 갈등해소전략이다. 당사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서로 일부씩 양보**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만든다. 어느 한쪽이 전부 얻는 방식이 아니라 양측이 일부를 포기하여 대립을 줄인다.

㉣ 조직의 분화: 이 문항에서는 갈등조성전략이다. 조직단위를 나누어 서로 다른 관점·목표와 견제 관계가 나타나게 함으로써 긴장과 변화를 유도하는 구조적 방법을 가리킨다. 갈등 당사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접촉을 줄이는 해소 방법과는 적용 목적을 구별해야 한다.

㉤ 정보량 조절: 이 문항에서는 갈등조성전략이다. 정보전달을 의도적으로 억제하거나 과도하게 노출하는 등 정보의 양을 조절하여 기존의 안정된 인식과 관계에 자극을 주는 방법이다. 오해를 풀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는 갈등해소 방법과 구별한다.

㉥ 순응: 갈등해소전략이다. 자신의 요구를 양보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여 대립을 줄인다. 서로 일부씩 양보하는 타협과 달리 한쪽이 상대방에게 맞추는 방식이다.

㉦ 인사이동: 이 문항에서는 갈등조성전략이다. 인적 구성을 바꾸어 익숙한 관계와 근무 분위기에 변화와 긴장을 주는 인사정책적 방법으로 분류한다. 다만 인사이동 자체가 항상 갈등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 갈등 당사자를 떨어뜨리거나 다른 부서의 입장을 이해하게 하려는 인사교류는 갈등 완화에도 활용될 수 있다.

㉧ 공공의 적 설정(확인): 갈등해소전략이다. 여기서 '공공의 적'은 갈등 당사자들 모두에게 위협이 되어 **함께 대응해야 할 대상**을 가리킨다. 당사자들의 주의를 내부 대립에서 함께 대처할 대상으로 돌려 협력과 결속을 유도한다. 갈등관리에서 말하는 '공동의 적 설정'의 작동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단순히 적대감을 높이는 모든 행위를 뜻하거나 외부와의 갈등까지 없앤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갈등해소전략은 ㉠·㉡·㉢·㉥·㉧이며, 이 조합은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9. 리더십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는 관리격자모형을 개발하면서 팀관리형, 과업형, 무관심형, 컨트리클럽형, 중간형의 리더십유형을 제시하였다.

② 블레이크(Blake)와 머튼(Mouton)은 생애주기론을 통해 팔로어의 상황(업무성숙도)과 리더의 행태(지시적 리더십 혹은 지원적 리더십)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성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③ 하우스(House)와 에반스(Evans)는 부하와의 관계설정을 통해 리더십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구성원 교환이론을 제시하였다.

④ 그린리프(Greenleaf)는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도와주며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을 제시하였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그린리프의 '서번트 리더십'은 **구성원을 먼저 섬기고 성장을 돕는 것**을 중시한다. 구성원이 공동 목표를 이루도록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이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관리격자모형'을 개발한 학자는 **블레이크와 머튼**이다. 이 모형은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을 두 축으로 삼는다. 팀관리형은 두 관심이 모두 높고, 과업형은 생산에 대한 관심만 높으며, 무관심형은 두 관심이 모두 낮다. 컨트리클럽형은 인간에 대한 관심만 높고, 중간형은 두 관심이 모두 중간 수준이다.

② X: '생애주기론'을 제시한 학자는 **허시와 블랜차드**이다. 부하의 업무수행 능력과 의지 등 성숙도에 맞추어 리더의 과업행동과 관계행동을 조절해야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과업행동은 무엇을 어떻게 할지 지시하는 행동이고, 관계행동은 쌍방향 의사소통과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이다.

③ X: 하우스와 에반스가 제시한 것은 **경로·목표이론**이다. 리더가 목표 달성의 경로를 명확히 하고 목표의 매력을 높여 부하의 동기와 성과를 높인다는 이론이다. 그레인(Graen) 등이 발전시킨 '리더·구성원 교환이론(LMX)'은 리더와 개별 부하 사이에 형성되는 교환관계와 그 관계의 질을 중시한다.

④ O: 그린리프가 제시한 '서번트 리더십'은 **구성원에 대한 섬김을 우선**하는 리더십이다. 리더는 구성원의 필요와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구성원이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원한다. 따라서 공동 목표를 이루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도우며 섬긴다는 설명은 서번트 리더십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0. 목표관리제(MBO)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50년대 드러커(Drucker)와 맥그리거(McGregor) 등에 의해 창시되었고, 1970년대 미국 정부에 도입되었다.

②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상향식 성과관리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③ 가시적이고 계량적인 목표에 집중하기 때문에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목표에 치중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④ 조직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SWOT분석 등을 활용하여 외부환경 분석과 내부평가를 진행하므로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환경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SWOT분석을 통해 조직의 내·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전략적 관리**의 특징이다.
목표관리제는 합의한 목표의 달성과 평가에 중점을 두므로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하다.

선지별 해설

목표관리제(MBO)는 상급자와 하급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함께 정하고, 구성원의 자율적 수행과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를 연결하는 관리 방식이다.

① O: 드러커는 1954년 목표와 자기통제에 의한 관리를 체계화했고, 맥그리거는 참여와 자기통제를 중시하는 관점으로 목표관리제의 발전에 기여했다. 민간 부문에서 발전한 목표관리제는 **1973년 닉슨 행정부**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관리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② O: 목표 설정 과정에 하급자가 참여하고 상급자와 협의하여 목표를 정하므로,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상향식** 성과관리라고 한다. 다만 개인의 목표는 조직 전체의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상급자와 하급자의 공동 합의가 중요하다.

③ O: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려면 일정 기간 안에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단기적·계량적 성과**와 개인·부서의 좁은 목표에 치중하면 장기적 성과나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운 질적 가치가 소홀해질 수 있다.

④ X: SWOT분석으로 내부의 강점·약점과 외부의 기회·위협을 파악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할 방향을 정하는 것은 **전략적 관리**의 특징이다. 목표관리제는 합의한 구체적 목표의 달성과 성과평가에 중점을 두므로, 목표와 평가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 더 적합하다. 환경이 급변하면 기존 목표의 적절성이 떨어질 수 있어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환경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NoteBase

문 21. 홉스테드(Hofstede)의 문화 차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네트워크문화(networked culture)는 사교성이 높고 결속이 낮은 문화인데 반해 용병문화(mercenary culture)는 사교성은 낮고 결속은 높은 문화이다.

② 개인주의 문화는 느슨한 개인 간 관계를 의미하며 집단주의 문화는 '우리'를 강조하는 결속력이 강한 개인 간 관계를 의미한다.

③ 남성문화에서는 경쟁, 성취, 권력 획득에 중요 가치를 두는 데 반해 여성문화에서는 관계나 안정에 중요 가치를 둔다.

④ 권력거리의 크기가 큰 문화에서는 상사의 권력이 강해 부하들이 상사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상사에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특징을 보인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네트워크문화와 용병문화는 **고피와 존스(Goffee & Jones)**가 사교성과 결속을 기준으로 나눈 조직문화 유형이다. 선지에 제시된 두 문화의 특성은 맞지만,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으로 제시한 점**이 적절하지 않다.

선지별 해설

① X: 네트워크문화와 용병문화는 **고피와 존스(Goffee & Jones)의 조직문화 분류**이다. 사교성은 구성원 간 친밀한 관계의 정도를, 결속은 공동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정도를 뜻한다. 네트워크문화는 사교성이 높고 결속이 낮으며, 용병문화는 사교성이 낮고 결속이 높으므로 유형별 특성 자체는 맞다. 다만 이를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으로 설명한 점이 적절하지 않다.

② O: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개인이 집단에 결합되어 있는 정도**를 구분하는 문화 차원이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중시하고 개인 간 유대가 비교적 느슨하다.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결속력이 강한 집단에 소속되어 보호와 충성을 주고받으므로 개인보다 '우리'라는 집단 정체성을 강조한다.

③ O: 남성문화는 경쟁에서의 성공, 성취, 지위와 권력의 획득을 중시한다. 여성문화는 **협력적 인간관계와 삶의 질·안정**을 중시한다. 여기서 남성·여성은 개인의 생물학적 성별을 판정하는 말이 아니라 사회가 중시하는 가치 성향의 구분이다.

④ O: 권력거리는 권력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정도이다. 권력거리가 큰 문화에서는 **상하 간 위계와 권한 격차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부하가 상사의 지시와 결정에 의존하고, 상사에게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관계가 나타난다.

NoteBase

문 22. 대표관료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킹슬리(Kingsley)에 의한 대표관료는 관료사회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② 반 라이퍼(Van Riper)는 대표관료제를 비례대표로 확대하여 사회집단 구성과 관료집단 구성의 비율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윌킨스(Wilkins)와 윌리엄스(Williams)는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전이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④ 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할당제가 실시되면 우수한 능력을 지닌 개인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사회집단과 관료집단의 구성 비율을 같게 하자는 비례대표 주장은 **크랜츠(Kranz)**의 것이다. 반 라이퍼(Van Riper)는 사회적 특성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대표성**까지 강조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킹슬리는 관료가 사회의 지배적인 세력과 공통된 사회적 배경·가치를 지니도록 구성되면 그 세력의 요구와 정책에 부응할 것이라고 보았다. 관료의 인적 구성을 통해 관료사회의 독자적인 권력 행사를 억제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관료제 통제**의 관점에서 대표관료제를 제시하였다.

② X: 대표관료제의 개념을 비례대표로 확대하여 사회집단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관료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같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학자는 **크랜츠(Kranz)**이다. 반 라이퍼는 관료제가 사회의 여러 집단을 폭넓게 반영하고, 사회적 특성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이념도 대표**해야 한다고 보았다. 선지는 크랜츠의 주장을 반 라이퍼에게 연결하였다.

③ O: 소극적 대표성은 관료의 사회적 배경과 인적 구성이 사회집단의 구성을 반영하는 것이고, 적극적 대표성은 관료가 실제 정책과 행정활동에서 출신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다. 윌킨스와 윌리엄스는 경찰조직의 사회화가 출신집단의 정체성보다 조직의 가치와 규범을 우선하게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같은 집단 출신 관료가 늘어도 그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동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④ O: 집단별 대표성을 확보하려고 할당제를 엄격하게 운용하면 개인의 능력과 실적보다 집단별 인원 배분이 우선될 수 있다. 이 경우 할당 대상이 아닌 집단의 유능한 지원자 등이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대표성 확보가 실적주의 및 개인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한다는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NoteBase

문 23. 계급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람 중심의 인적자원관리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행정가 육성을 지향한다.

② 고위공무원을 우대하여 엘리트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③ 객관적 인사평가기준을 제시하며, 인적자원의 교육훈련 수요 파악에 유리하다.

④ 직무경계가 모호해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객관적 인사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교육훈련 수요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유리한 제도는 **직위분류제**이다. 계급제는 사람의 자격·능력과 계급을 중심으로 관리하므로, 개별 직무의 요구에 맞춘 평가와 교육훈련 수요 파악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계급제는 직무 자체보다 **사람의 자격과 일반적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분류하는 제도이다. 특정 직무에만 전문화된 인력보다 여러 업무를 폭넓게 담당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일반행정가의 육성을 지향한다.

② O: 계급제는 계급에 따른 지위와 처우의 차이를 중시하며, 상위 계급에 높은 권위와 우대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의 엘리트화**가 나타날 수 있다.

③ X: 객관적인 인사평가기준의 제시와 교육훈련 수요 파악의 용이성은 **직위분류제의 장점**이다.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내용·책임·필요 역량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므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직무가 요구하는 역량과 담당자의 현재 역량을 비교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파악하기 쉽다. 사람 중심인 계급제의 장점으로 설명한 부분을 직무 중심인 직위분류제의 장점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계급제에서는 개별 직무의 내용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보다 사람의 계급을 중심으로 인사를 관리한다. 그 결과 **직무와 책임의 경계가 불명확**해져 담당 업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NoteBase

문 24.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의 시보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급 공무원 신규채용시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 신규 채용시에는 6개월간을 시보 임용 기간으로 한다.
㉡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다.
㉢ 임용(제청)권자가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제청)할 경우에는 면직(제청)과는 달리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임용(제청)권자는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로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해당공무원을 면직(제청)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3번

㉠

신규채용 시 시보임용 기간은 **5급 공무원은 1년, 6급 이하 공무원은 6개월**이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 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 · 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

㉡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감봉 처분 기간은 **시보 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 임용)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NoteBase

㉣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임용제청하는 경우와 면직·면직제청하는 경우에는 **모두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의결을 생략할 수 없다.

공무원임용령 제23조(시보임용)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거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감봉·견책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르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시보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 제청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23조(시보임용)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 제청할 수 있다.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NoteBase

문 25. 시험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예측적 타당성은 합격자의 시험성적과 합격 후 일정기간이 흐른 다음 근무성적을 추적하여 비교하는 검증방법으로 구성타당도에 해당된다.

② 동시적 타당성은 재직자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여 그들의 근무성적과 시험성적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기준타당도에 해당된다.

③ 차별적 타당성은 동일 개념에 대한 상이한 측정방법에 의한 측정값의 상관성 정도를 검증하는 것으로 기준타당도에 해당된다.

④ 수렴적 타당성은 다른 개념에 대한 동일한 측정방법에 의한 측정값의 차별화 정도를 검증하는 것으로 구성타당도에 해당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재직자의 시험성적을 같은 시기의 근무성적과 비교하는 것은 **동시적 타당성**이다. 근무성적이라는 외부 기준과의 관련성을 검증하므로 **기준타당도**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기준타당도는 시험성적이 근무성적 등 외부 기준과 얼마나 관련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고, 구성타당도는 측정하려는 이론적 개념을 실제로 제대로 측정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① X: 합격자의 시험성적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의 근무성적과 비교하는 것은 예측적 타당성의 검증방법이다. 다만 미래의 근무성적을 외부 기준으로 삼으므로 구성타당도가 아니라 **기준타당도**에 해당한다.

② O: 동시적 타당성은 재직자에게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을 **같은 시기의 근무성적**과 비교한다. 시험성적과 외부 기준인 근무성적의 관련성을 확인하므로 기준타당도에 해당한다. 시험성적과 이후의 근무성적을 비교하는 예측적 타당성과는 기준을 측정하는 시점이 다르다.

③ X: 동일 개념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측정값들이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차별적 타당성이 아니라 **수렴적 타당성**이다. 서로 다른 측정방법이 같은 개념을 포착하는지를 확인하므로 기준타당도가 아니라 구성타당도에 해당한다.

④ X: 서로 다른 개념을 같은 방법으로 측정해도 측정값들이 구별되고 지나치게 높은 상관성을 보이지 않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차별적 타당성**이다. 수렴적 타당성은 동일 개념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측정한 값들의 높은 상관성을 확인한다. 두 타당성 모두 구성타당도를 검증하는 데 사용된다.

NoteBase

문 2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 제정되었다.
㉡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인가·허가·면허·특허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3번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 5월 18일 제정**되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1. 5. 18.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감사와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은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군 장교는 **중장 이상**이 그 범위에 포함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24>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바.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파. 공기업의 장 · 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 · 부총재 · 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 · 부원장 · 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NoteBase

ⓒ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선지의 20일이 틀렸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 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 승인 · 검사 · 검정 · 시험 · 인증 · 확인, 지정 · 등록, 등재 · 인정 · 증명, 신고 · 심사, 보호 · 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NoteBase

문 27. 정부 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며,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의미한다.
㉡ 2007년부터 발효된 「국가재정법」에 의해 기존 「기금관리기본법」이 폐지되었다.
㉢ 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의 5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그 운용 실태를 조사 평가하여야 하며, 5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한다.
㉤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나, 기술보증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일 경우(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1 이하로 한다)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2번

㉠
기금은 특정 목적의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하며,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6.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NoteBase

ㄴ

국가재정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이때 **기금관리기본법이 폐지**되었다.

국가재정법(2006. 10. 4. 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재정법(2006. 10. 4. 제정) 부칙
제2조 (폐지법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ㄷ

기금 지출금액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이월이 금지**된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
①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ㄹ

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의 3분의 1 이상**의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고, **3년마다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한다.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①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 · 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NoteBase

ⓞ

기술보증기금은 금융성 기금이므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이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관리·운용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의 변경한도는 **10분의 2 이하**이다.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0.6.9>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국가재정법 [별표 3] 금융성 기금(제70조제3항 관련)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NoteBase

문 28. 조세지출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행정부의 조세지출을 입법부 차원에서 통제하고, 조세감면이나 비과세 등의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정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 조세지출은 보조금 성격을 가지므로 대외적 공개 시 국제 무역마찰의 가능성이 있다.
㉢ 조세지출예산제도는 부정한 조세지출을 방지할 수 있고, 재정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조세지출항목이 신설 또는 폐지되어 의회의 주기적 심사 대상이 되지 못할 때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다.
㉤ 조세지출의 직접감면은 비과세, 소득공제, 저율과세, 세액감면 등이며, 간접감면은 세액공제, 준비금, 과세이연, 이월과세 등이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빼서 세부담 자체를 줄이는 **직접감면**이다. 준비금·과세이연·이월과세처럼 **과세시점을 늦추는 간접감면**과 구별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비과세·감면 등으로 포기한 세입의 규모와 내용을 예산 형식으로 파악·공표하여, 세출예산과 함께 재정활동을 평가하고 통제하는 제도이다.

㉠ O: 조세감면의 규모와 수혜대상이 드러나면 입법부가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특정 집단에 혜택이 편중되는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특혜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재정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O: 세금을 줄여 주는 것은 수혜자에게 재원을 지원하는 보조금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공개된 세제지원이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특혜로 문제 되면 **국제 무역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모든 조세지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보조금이라는 뜻은 아니다.

㉢ O: 조세지출의 내역을 공개하고 심사하면 부당한 특혜나 자의적인 지원을 발견·억제할 수 있다. 또한 세출예산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지원까지 파악하므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지원 규모와 **재정정책의 효과를 판단할 기초자료**가 된다.

㉣ O: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실효성은 조세지원이 주기적으로 공개되고 심사되는 데 달려 있다. 행정부의 재량적 신설·폐지가 **의회의 주기적 심사에서 벗어나면** 지원의 필요성과 성과를 통제하기 어려워져 제도의 의미가 약화되거나 상실될 수 있다.

㉤ X: **세액공제는 간접감면이 아니라 직접감면**이다. 비과세·소득공제·저율과세·세액감면·세액공제는 납부할 세부담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다. 준비금·과세이연·이월과세는 일정 기간 과세를 미루어 자금 이용상의 이익을 주는 간접감면에 해당한다.

옳은 보기는 ㉠·㉡·㉢·㉣의 4개이므로 ③의 4개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29. 예산의 분류 중 기능별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세입·세출에 적용되며, 정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 한다.

②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 영역별로 예산 내용을 분류하는 것으로 정부가 수행하는 주요 사업의 목록과 같다.

③ 행정수반의 재정정책 수립을 쉽게 하고, 예산의 전체적인 윤곽을 밝히는 데 유용하다.

④ 융통성이 지나쳐 회계책임의 확보가 어렵고 기관별 예산 흐름의 파악이나 입법부의 효율적인 통제가 어렵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기능별 분류는 정부가 어떤 목적에 돈을 쓰는지를 보여 주는 **세출예산의 분류**이다. 시민에게 정부 활동의 전체 모습을 알려 준다는 설명은 맞지만, **세입에도 적용된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해설

기능별 분류는 국방·교육·복지 등 정부 활동의 목적과 분야를 기준으로 세출예산을 묶는 방법이다.

① X: 기능별 분류는 지출의 목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세출예산에 적용**된다. 조세 등 돈을 거두어들이는 세입까지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어떤 활동에 재원을 배분하는지 시민이 이해하기 쉬워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 하는 부분은 맞다.

② O: 예산을 담당 기관이나 구입 물품이 아니라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 영역**에 따라 분류한다.
교육·국방·사회복지 등 주요 활동별 지출을 한눈에 보여 주므로, 정부의 주요 사업을 분야별로 정리한 목록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③ O: 기능별 지출 규모를 보면 정부가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는지와 전체 재원의 배분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분야별 재원배분의 전체 모습**은 행정수반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정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④ O: 기능별 분류는 기관이나 세부 지출 항목보다 포괄적인 목적을 중심으로 묶으므로, 이 분류만으로는 집행을 세밀하게 통제하기 어렵다. 여러 기관의 지출이 같은 기능에 모일 수 있어 **기관별 예산 흐름과 회계책임**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기관별·품목별 통제에 비해 융통성이 크지만, 입법부의 구체적인 지출 통제와 책임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NoteBase

문 30. 예산 결정 모형 중 다중합리성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황의 불확실성과 인간능력의 한계를 전제로 의사결정자의 분석능력의 제약과 시간부족, 대안 비교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소폭의 변화만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모형이다.

② 예산운영 과정에서 서로 성질이 다르지만, 연결된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의 다섯 개의 의사결정 흐름이 통합되면서 초래되는 모형이다.

③ 독립적인 조직들이나 조직의 하위 단위들이 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누릴 수 있는 조직의 예산결정에 적합한 모형이다.

④ 미시적 수준의 예산의사결정을 설명하며, 다양한 시점에서 단계별로 작용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모형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다중합리성 모형은 미시적 예산의사결정에서 경제적·정치적·사회적·법적·기술적 판단 기준 등이 함께 작용한다고 본다. 핵심은 예산과정의 **시점과 단계에 따라 다양한 합리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불확실성과 분석능력·시간의 제약 때문에 기존 예산을 기준으로 **소폭의 증감만 검토**하는 것은 '점증모형'이다. 모든 대안을 처음부터 포괄적으로 비교하기보다 전년도 예산에서 달라지는 부분에 검토를 집중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② X: 세입·세출·균형·집행·과정이라는 **다섯 의사결정 흐름의 상호작용**으로 예산결정을 설명하는 것은 '실시간 예산운영모형'이다. 각 흐름은 서로 다른 문제를 다루면서도 연결되어 있어, 한 흐름에서 이루어진 결정이 다른 흐름에 영향을 준다. 여기서 다섯 흐름은 의사결정의 영역이며, 다중합리성 모형이 강조하는 다양한 판단 기준과는 구별된다.

③ X: 조직의 각 단위가 느슨하게 연결되어 독립성과 자율성이 큰 상황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것은 '쓰레기통모형'이다. 목표가 불명확하고 참여가 유동적인 조직에서는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가 우연히 결합**하면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명확한 목표에 따라 대안을 순차적으로 비교하는 과정만으로 예산결정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된다.

④ O: '다중합리성 모형'은 예산분석가 등 개별 참여자의 미시적 예산의사결정에 주목한다. 예산결정에는 경제적 효율성뿐 아니라 정치적 수용 가능성, 사회적 필요, 법적 타당성, 기술적 실행 가능성 등 다양한 합리적 기준이 작용한다. **시점과 단계에 따라 여러 합리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예산이 결정된다는 설명이므로 발문에 부합한다.

NoteBase

문 31. 우리나라 각 부처의 예산 요구에 관한 중앙예산기관의 대응전략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선순위 표시법은 하급기관이 예산 항목 간의 우선순위를 명시해 줌으로써 예산삭감이 편리하고 시급한 사업이 중시될 수 있지만, 예산항목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② 증감분석법은 역점사업이나 예산 비중의 변화 파악이 수월하며 전년도와의 차이가 있는 부분만 사정하므로 각 기관에 필요한 기본 예산액에 대한 검토가 등한시된다.

③ 무제한 예산법은 하급기관에서 요구하는 예산액에 제한을 두지 않아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가 편하지만, 상급기관이 예산 삭감에 모든 부담을 지므로 예산사정에 어려움이 있다.

④ 항목별 통제법은 전체 사업의 관점에서 개별 사업들을 검토하기 쉽지만, 한 직원이 모든 부처의 인건비, 공공요금 등의 단일항목을 사정할 수는 없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항목별 통제법은 한 직원이 여러 부처의 **동일한 지출항목을 사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항목별 지출 통제에는 유리하지만 **전체 사업 관점의 검토는 어렵다**.

선지별 해설

① O: 우선순위 표시법은 하급기관이 예산요구에 포함된 항목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제시하는 방법이다. 중앙예산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순위가 낮은 항목부터 삭감**하고 시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목적과 성격이 다른 항목을 비교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정해야 하므로 우선순위 결정이 쉽지 않다.

② O: 증감분석법은 전년도에 인정된 기본 예산을 대체로 유지한 채 **전년도와 달라진 증감 부분을 중심으로 사정**하는 방법이다. 증액·감액의 규모와 비중을 비교하여 역점사업이나 예산 배분의 변화를 파악하기 쉽지만, 기존 기본 예산 자체가 적정한지는 충분히 재검토하지 못한다.

③ O: 무제한 예산법은 하급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예산액의 **상한을 미리 정하지 않는** 방법이다. 하급기관은 원하는 신규 사업과 규모를 제시하기 쉽지만, 가용 재원에 맞추어 요구액을 삭감하는 부담이 상급기관에 집중되므로 예산사정이 어렵다.

④ X: 항목별 통제법은 인건비·공공요금 등 개별 지출항목을 기준으로 요구액을 검토하는 방법이다. 항목별로 심사 업무를 나누면 **한 직원이 모든 부처의 동일한 단일항목을 사정할 수 있다**. 반면 항목별 금액에 집중하므로 사업 간 연관성이나 전체 목적을 함께 고려하여 **개별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렵다**. 선지는 이 장점과 한계를 반대로 서술했다.

NoteBase

문 32. 「국고금 관리법」상 예산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수입징수관은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은 분리되어 있다.
㉡ 수입은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징수·수납되어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면 안 된다.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특별회계는 수입금을 선사용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1번

㉠
수입징수관은 **수입의 징수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국고금 관리법 제9조(수입징수사무의 위임 등)
② 수입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국고금 관리법 제1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수입징수관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를 겸할 수 있다.

㉡
수입은 법령에 따라 징수·수납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직접 사용할 수 없다**.

국고금 관리법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NoteBase

㉢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면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제29조(지출금의 반납)
②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

수입금을 선사용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특별회계**이다. 선지는 그 근거 법률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으로 잘못 제시하였다.

국고금 관리법 제18조(선사용자금)
①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는 제7조 및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을 선사용자금(국고에 납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 지출금으로 대체납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운용할 수 있다.

NoteBase

문 33. 재정민주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정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전제하여 국민이 예산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감시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능동적 주체로 활동한다.

② 빅셀(Wicksell)은 국가가 시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시민의 재정 선호를 반영하여 예산을 집행할 때 성립된다고 보았다.

③ 시민들의 재정 선호가 반영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이다.

④ 시민의 재정선호를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정보공개청구, 주민감사청구, 납세자소송제도가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정보공개청구·주민감사청구·납세자소송제도는 재정선호의 반영 여부를 **감시·통제하는 수단**이다. 시민의 선호를 예산 의사결정에 직접 반영하는 수단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공청회, 시민대표의 위원회 참여 등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재정민주주의는 재정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이 국민에게 있다는 **납세자 주권**을 바탕으로 한다. 국민은 세금을 내고 공공서비스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과정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며 재정운영을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주체이다.

② O: 빅셀(Wicksell)은 시민에게서 거둔 세금으로 **시민의 재정선호를 반영한 예산을 집행**할 때 재정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재정선호란 어떤 공공서비스나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기를 원하는지에 관한 시민의 의사이다. 따라서 조세를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지출에도 시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③ O: 시민의 재정선호가 예산에 반영되려면 시민이 자신의 수요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는 이러한 선호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형성·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경제적 전제 조건이다.

④ X: 정보공개청구·주민감사청구·납세자소송제도는 시민의 재정선호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장치**이다. 정보공개청구로 재정운영 자료를 확인하고, 주민감사청구로 문제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며, 납세자소송으로 재정지출의 부정·낭비에 대한 시정을 구한다. 예산의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의 선호를 직접 반영하는 방식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편성 공청회, 시민대표의 위원회 참여, 재정수요 조사 등이 있다. 선지는 의사결정 참여와 감시·통제의 수단을 혼동하였다.

NoteBase

문 34.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민자치는 주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지역의 공공문제를 주민의 의사와 참여에 기초하여 그들의 판단, 부담,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단체자치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가 당해지역의 행정을 자신의 권능과 책임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주민자치는 그 권리 또는 권한이 부여된 연원을 천부적인 기본권에 두고 있으며, 단체자치는 국가 또는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대해 법인격과 그에 따른 지방업무 수행권을 부여했다는 수탁설에 그 성립의 기초를 두고 있다.

③ 주민자치는 지방정부의 사정을 고려하여 포괄적 수권주의를 채택하고,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사항으로 개별적 수권주의를 채택한다.

④ 주민자치는 입법적·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기관통합형에 기초하고, 단체자치는 행정적 통제를 중심으로 기관대립형에 기초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전통적 비교에서 주민자치는 권한을 사무별로 정하는 **개별적 수권주의**, 단체자치는 지역사무에 대한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포괄적 수권주의**와 연결된다. 두 유형의 수권 방식을 서로 바꾸어 설명한 것이 잘못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주민자치는 주민의 참여, 단체자치는 국가와 구별되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에 중점을 둔다. 수권 방식·통제·기관구성은 두 유형의 전통적 특성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① O: 주민자치는 주민주권에 따라 지역의 공공문제를 주민의 의사와 참여를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비용과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단체자치는 국가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가 자기 권한과 책임으로 지역행정을 처리하는 것이다. 전자는 **주민과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민주주의를, 후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서 지방분권을 강조한다.

② O: 주민자치는 자치권을 국가가 부여하기 전부터 주민에게 존재하는 **고유한 권리**로 보는 고유권설과 연결된다. 단체자치는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보는 수탁설과 연결되므로, 국가가 법인격과 지방사무 처리 권한을 인정한다는 설명에 해당한다.

③ X: 수권 방식의 연결이 뒤바뀌었다. 주민자치는 법률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사무에 관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개별적 수권주의**와 연결된다. 단체자치는 법령상 제한되는 사항 등을 제외하고 지역사무를 폭넓게 처리할 권한을 인정하는 **포괄적 수권주의**와 연결된다. 주민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과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은 서로 다른 비교 기준이다.

④ O: 전통적 주민자치에서는 의회의 법률과 법원의 판단에 의한 입법적·사법적 통제가 중심이며, 지방의회에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결합하는 **기관통합형**과 연결된다. 단체자치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지도·감독 등 행정적 통제가 중심이며,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게 하는 **기관대립형**과 연결된다.

NoteBase

문 35. 신중앙집권화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규모 자치단체의 통합과 중심도시와 주변 도시의 통합 등을 통해 광역행정 체제로 발전하여 권한이 집중되고 있다.

② 현대산업사회로 진행하면서 행정 기능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복잡화로 국가·지방 공동 소관 사무가 증가하고, 국가 직속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③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국가의 공공 재원인 보조금과 교부금에 의한 행정이 늘어나면서 사전적·사후적 통제가 늘어나고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보다 고유사무의 비중이 커져서 지방에 대한 중앙통제가 강화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신중앙집권화에서 중앙통제를 강화하는 요인은 **고유사무가 아니라 위임사무의 비중 증가**이다. 고유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으로 처리하는 사무이므로, 그 비중의 확대를 중앙통제 강화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선지별 해설

신중앙집권화는 지방자치를 유지하면서도 확대·복잡해진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관여가 강화되는 현상이다.

① O: 소규모 자치단체끼리 통합하거나 중심도시와 주변 도시를 통합하면 개별 지역을 넘는 교통·환경 등의 문제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 분산되어 있던 권한이 **더 넓은 행정 단위로 집중**되는 것은 신중앙집권화의 한 형태이다.

② O: 산업화로 행정 기능이 늘어나고 복잡해지면 지방만의 노력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가 증가하여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담당할 필요가 커진다. 국가가 지방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직속 기관의 확대**도 중앙정부의 행정적 역할을 강화한다.

③ O: 보조금·교부금 등 중앙재원에 대한 지방의 의존이 커지면 재원 배분과 사업 집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영향력도 커진다. 특히 보조사업의 지원 기준·조건 설정은 사전적 통제로, 집행 상황·성과 확인은 사후적 통제로 작용하므로 **재정지원을 통한 중앙통제**가 강화된다.

④ X: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관계를 반대로 설명했다. 고유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으로 처리하는 사무이고, 위임사무는 국가 등 다른 행정주체가 맡긴 사무로 위임 주체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중앙통제 강화와 연결되는 것은 **고유사무에 비해 위임사무의 비중이 커지는 것**이다.

NoteBase

문 36.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층이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연결구조를 의미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연결되는 단층제와 중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중층제가 있다.

②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계층 구분은 광역과 기초로 2계층의 중층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로 구분한다.

③ 단층제는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의사전달이 원활하지만, 지방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다.

④ 중층제는 공공기능의 분업적 수행을 가능하게 하지만, 행정책임의 모호성이 존재한다.

정답 2, 3번

①

자치계층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연결구조이다. **단층제는 하나의 자치계층이 중앙정부와 직접 연결**되고, **중층제는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에 광역자치단체 등 다른 자치계층이 존재**한다.

②

광역자치단체의 법정 종류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다. 선지는 광역과 기초의 기본적인 계층 구분은 설명하지만, **통합특별시를 누락**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개정 2026.3.5>
1.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③

단층제는 기초자치단체의 의사가 중간 자치계층을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에 직접 전달되므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반영하기에 유리**하다. 지방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잘못이다.

④

중층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기능을 나누어 **공공기능을 분업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여러 계층의 기능과 권한이 겹치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

NoteBase

문 37. 「지방자치법」상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정답 1번

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으므로, 조례로 정한다고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채무 이행을 늦추려면 **조례 또는 계약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NoteBase

④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효력을 변경하려면 **법령·조례의 근거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NoteBase

문 38. 라이트(Wright)의 정부 간 관계 모형 중 중첩권위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상호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기능적으로 상호의존관계를 맺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다.

② 지방정부는 재량권을 갖고 중앙정부에 영향력을 미치는 엘콕(Elcock)의 동반자 모형과 유사하다.

③ 지방정부는 자치사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위임사무의 경우 단체위임사무의 비중이 크다.

④ 지방정부의 인사는 중앙정부와 상호교류하고, 재정은 상호의존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엘콕의 동반자모형은 중앙과 지방의 독립적·대등한 지위를 중시하는 **분리권위형**에 대응한다. 중첩권위형과 유사한 것은 서로 필요한 자원을 교환하며 상호의존하는 **교환모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중첩권위형에서는 각 정부가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일부 기능을 공유**한다. 공동의 사무는 일방적인 지시보다 협상과 협력으로 처리하므로, 지방의 자율성과 정부 간 협력을 조화시키는 이상적 모형으로 설명된다.

② X: 지방정부의 재량권과 중앙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은 엘콕의 동반자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나 동반자모형은 중앙과 지방의 독립적·대등한 지위를 중시하므로 라이트의 분리권위형에 대응한다. 중첩권위형과 유사한 것은 자원 교환에 따른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엘콕의 교환모형**이다.

③ O: 중첩권위형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하므로 자치사무가 중심이 되면서도 중앙과 지방이 사무를 나누어 수행한다. 위임사무 중에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맡기는 **단체위임사무의 비중이 크며**, 이는 지방의 자율성과 정부 간 기능 공유를 함께 반영한다. 중앙정부의 집행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가 주종을 이루는 것은 포괄권위형이다.

④ O: 중첩권위형에서는 인사체계를 구별하면서도 정부 간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공동사업에 대한 재원 지원과 비용 분담 등으로 **재정적 상호의존관계**가 형성된다. 인사와 재정이 완전히 분리되는 분리권위형이나 중앙에 종속되는 포괄권위형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39. 역대 정부의 지방자치에 관한 기능 배분 관련 법령과 추진 기구의 연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김대중 정부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노무현 정부 - 「지방분권특별법」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이명박 정부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 박근혜 정부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지방분권위원회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

김대중 정부는 1999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통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을 추진하였다.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1999. 1. 29. 제정) 제6조 (설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출범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해 2004년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의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였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규정(2004. 2. 1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국정전반에 걸친 혁신을 통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혁신에 관한 사항과 지방분권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분권추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정부혁신 · 지방분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2.17>

NoteBase

ⓒ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2008. 2. 29. 전부개정) 제17조(추진기구) 지방분권 추진과제의 종합적 · 체계적 · 계획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박근혜 정부 당시 종전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승계한 추진 기구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였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13. 5. 28. 제정) 부칙 제4조 제1항
제4조(사무이관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이하 "종전의 두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제44조에 따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승계한다.

NoteBase

문 40.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지방교부세의 재원에는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총액의 19.24%,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포함하고 있다.
㉡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1번

㉠

교부세 재원에는 **법정 제외분을 뺀 내국세 총액의 19.24%**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가 포함된다. 내국세 산정에서는 목적세·종합부동산세, 담배 개별소비세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9.12.10>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NoteBase

ㄴ

보통교부세 산정기일 후의 재난 복구,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또는 재정수입 감소에 배정하는 금액은 **특별교부세 재원의 50%**이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14.1.1>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ㄷ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급한 협력사업, 지역 역점시책이나 행정·재정운용 우수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에 따른 특별한 재정수요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를 교부한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14.1.1>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ㄹ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하는 부분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5**이다.
선지의 100분의 20은 법정 비율과 다르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다만, 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4.12.31>

ㅁ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때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는 교부할 수 없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 <신설 2014.1.1, 2014.11.19, 2014.12.31, 2017.7.26>

NoteBase